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수사결과

-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26. 1.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검찰은 어제(2. 12. 목)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및 송환 경과>

-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 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당초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피고인들을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 아울러 '25. 12.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해인들에 대한 송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

<수사 결과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 검찰은 피해인들의 송환 이후 피해인들에 대한 면밀한 보완수사 및 피해인들보다 먼저 한국으로 송환된 공범(조직원)에 대한 관련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인들이 '24. 1.경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4. 11.경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물적 설비를 갖춘 다음,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으며, 피해인들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관리체계 및 범행수법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 피해인들 담당 역할》

•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 (강○○, 男) '딥페이크' AI 기술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마치 투자전문가인 듯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투자금 명목의 금원 송금을 유도
- (안△△, 女)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 새로 조직한 범죄단체에서 활동

- (강○○, 男) 투자금을 제공받아 사무실, 숙소 등을 마련하고, 허위 투자회사 설립, 홈페이지 제작 등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중국인 투자자 등과 소통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호감을 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전송하도록 유도
- (안△△, 女)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총 38명을 기소(37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였고, 그 중 24명에 대해 1심 선고, 10명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된 상황입니다(7명 판결 확정).
- 또한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25. 11.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추적 및 동결 등을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송부하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25. 12.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하여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한 한국의 요청이 있을 시 캄보디아 FIU에서 신속하게 협력하여 줄 것을 약속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유출·은닉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대한민국 형사사법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범죄에는 어떠한 예외나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검찰국 국제형사과	책임자	과 장 이 지 연	02-2110-3553
		담당자	검 사 황 익 진	02-2110-3554